<제2021-27호> <2021.7.16.>

한국은행 BANK OF KOREA

최신 해외학술 정보

경제연구원

본 자료는 최근 발표된 해외 학술논문중 당행의 통화신용정책 등 제반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을 선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제공됩니다. 논문제목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PC 화면에서 해당 논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금융통화

① "Monetary Policy Risk: Rules vs. Discretion"

출처: *NBER Working Paper Series No. 28983*

저자: David Backus(NYU), Mikhail Chernov(UCLA), Stanley E. Zin(NYU), Irina Zviadadze(HEC Paris)

【핵심내용】

○ 본고는 거시 기간구조(macro term-structure) 모형에 통화정책의 장기 중립성 제약*을 부여하여 재량적 통화정책(monetary policy discretion) 충격을 식별하고, 동 충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* 통화정책 충격이 실물변수에 단기적 영향은 미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줄 수 없다는 제약

- 1980.3/4~2019.4/4분기 중 미국 실물 및 금융시장 데이터에 GMM을 적용하여 거시 기간구조 모형을 추정하고 통화정책 충격*의 영향을 분석

* 관측가능한 정책금리는 준칙에 기반한 목표금리(target-rate)와 재량적 통화정책 충격(discretion)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

○ 실물변수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재량적 정책 완화와 목표금리 인하 효과 모두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나, 성장률에는 서로 반대 방향*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
* 목표금리 인하는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, 재량적 완화 충격은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

○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재량적 통화정책 충격은 금융시장 위험프리미엄의 평균과 분산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분석*

* 장기 채권 위험프리미엄의 약 20%가, 위험프리미엄 분산의 약 17%가 재량적 정책 충격에 기인

○ 장기 금융시장에서는 목표금리 인하와 재량적 정책 완화가 채권의 위험프리미엄을 높이지만, 단기 시장의 경우 재량적 충격은 위험프리미엄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

○ 수익률곡선과의 동태적 상관관계를 보면, 목표금리는 장·단기 수익률과 유사하게 변화하면서 수익률곡선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반면, 재량적 충격은 단기 수익률 변화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면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미침

○ 본고의 분석결과는 통화정책의 장기 중립성이 전제되는 경우 준칙에 기반하지 않은 재량적 통화정책 충격은 실물경제에 의도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장기 금융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

【분석방법론】 Generalized Method of Moment Estimation

② "Micro Risks and Pareto Improving Policies with Low Interest Rates"

출처: *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, Staff Report No. 625*

저자: Mark Aguiar(Princeton大), Manuel Amador, Cristina Arellano(FRB of Minneapolis)

【핵심내용】

○ 본고는 국채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은 환경(r<g)에서 재정정책을 통한 파레토 개선(Pareto improving)의 조건 및 달성 가능성에 대해 이론모형과 실증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

- 이론적 측면에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선호와 소득이 이질적인 Bewley-Huggett-Aiyagari 불완전 시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

- 실증적으로는 미국의 거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재정정책의 범위를 평가

○ 이론적 분석 결과, 파레토 개선을 위한 기본 조건은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의 편익이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이자부담 등 제반 비용을 초과하는 것임

- 예를 들어,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자본수익률과 임금 등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,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정책이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동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해야만 파레토 개선이 가능

- 또한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, 민간부문이 정부부채를 어느 정도 규모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등도 재정정책의 파레토 개선 가능성을 결정

○ 실증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도 재정정책으로 이전지출을 통한 위험공유,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이 촉진되는 경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함을 보임

- 기본 시나리오*에서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수입이 이전지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후생 편익 발생**

*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부채가 GDP 대비 0%에서 60%로 상승하고 자본축적은 불변

** 국채발행이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 후생 편익이 2.62% 상승하고 자산보유 하위 10%는 3.57%, 자산보유 상위 10%는 2.82%의 후생 편익 발생

- 자본축적이 증가하는 경우 기본 시나리오에 비해 더 큰 폭의 파레토 개선이 가능*

* 국채발행이 없는 경우에 비해 평균 후생 편익이 5.16% 상승하고 자산보유 하위 10%는 5.19%, 자산보유 상위 10%는 7.12%의 후생 편익 발생

-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수입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과도한 부채증가는 이자부담 확대 등을 통해 정부수입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래퍼곡선의 형태를 보임을 발견

○ 본고의 분석 결과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정정책 활용은 사회후생의 파레토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, 적정 규모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채발행은 이자부담 확대 등을 통해 사회 후생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

【분석방법론】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

거시경제

③ "Countercyclical Fluctuations in Uncertainty are Endogenous"

출처: *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, Working Paper 2109*

저자: Joshua Bernstein(Indiana大), Michael Plante, Alexander W. Richter(FRB of Dallas), Nathaniel A. Throckmorton(William&Mary大)

【핵심내용】

ㅇ 총 불확실성(aggregate uncertainty)의 경기역행적(countercyclical)인 변동*은 미국 데이터에서 일관성 있게 관측되는 주요 특징

*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이 경기침체기에 높게 나타나는 현상

- 그러나 이러한 음(-)의 상관관계가 불확실성 충격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어 나타난 것인지 혹은 실물 충격이 불확실성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속

ㅇ 본 연구는 기술 수준(level, 1st moment) 충격과 불확실성(uncertainty, 2nd moment) 충격이 존재하는 구조적 모형을 통해 불확실성과 경기변동의 관계를 분석

- 73개 실물변수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불확실성을 측정

- 실물경기변동(RBC) 모형, 뉴케인지언(NK) 모형, 탐색 및 매칭(Diamond-Mortensen-Pissarides, DMP) 모형 등을 이용

ㅇ 분석 결과, 실물경제의 변동은 불확실성의 변동을 발생시키지만, 불확실성의 외생적 변동은 실물경제의 유의미한 변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위의 세 모형을 모수 설정(calibration)을 통해 분석한 결과 RBC, NK 모형에서는 GDP와 불확실성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, DMP 모형에서는 GDP가 하락하는 경우 수준 충격이 불확실성의 내생적인 상승을 유발*

* 부정적 기술 충격으로 GDP가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는데, 실업자 수 증가로 인해 미래 실업자 수 감소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래 GDP의 변동성도 증가

- 실제 데이터와 부합하는 DMP 모형을 시뮬레이션 적률추정법(Simulated Method of Moments)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, 불확실성의 변동은 대부분 수준 충격에 의해 내생적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성 충격은 실물변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

ㅇ 본 연구는 외생적인 불확실성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불확실성 변동은 실물경제의 충격으로부터 내생적으로 발생한다는 반론을 이론·실증적 측면에서 제기

- 다만 본 연구는 금융변수를 제외하고 실물변수의 불확실성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, 금융 불확실성과 경기변동의 관계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

【분석방법론】 Simulated Method of Moments, Vector Autoregression

④ "Inflation During the Pandemic: What Happened? What is Next?"

출처: *CEPR Discussion Paper DP16328*

저자: Jongrim Ha, Ayhan Kose, Franziska Ohnsorge(World Bank)

【핵심내용】

○ 본 연구는 과거 글로벌 경기침체 사례 및 계량모형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, 향후 물가상승률을 전망

- 요인 활용 벡터자기회귀모형(Factor-augmented VAR)을 이용*하여 글로벌 물가상승률 변동 요인을 수요, 공급(유가 제외), 유가 요인으로 분해

* 1970~2021년 중 30개 선진국 및 55개 신흥시장국의 월 및 분기별 산업생산증가율, 물가상승률, 유가상승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글로벌 경제성장률, 물가상승률, 유가상승률을 모형 분석에 활용

○ 사례 분석 결과, 지난 50년간 5 차례 경기침체* 중 코로나19 경기침체 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폭이 가장 작고 기간도 짧게 나타났는데, 이는 각국이 전례 없는 수준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수요를 견인한 결과

* 1975년(1차 석유파동), 1982년(2차 석유파동), 1991년(걸프전), 2009년(글로벌 금융위기) 포함

- 5 차례 경기침체의 글로벌 물가상승률 누적 하락폭은 평균 6.2%p인데 반해, 2020.1~5월 중 물가상승률 누적 하락폭은 0.9%p에 불과

- 기존에 물가상승률 상승 반전이 가장 빨랐던 2009년 경기침체 시 상승 반전까지 1년이 걸린 반면, 코로나19 경기침체는 5개월만인 2020.6월부터 상승으로 반전

○ 계량모형 분석 결과, 2020.1~5월 중 물가상승률 변동의 상당 부분을 수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이동제한조치,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은 물가상승률 하락요인인 반면, 기업 활동 감소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공급 감소는 상승요인으로 작동

- 동기간 물가상승률 하락요인이 상승요인을 능가하여 물가상승률 하락의 80%는 수요 감소에, 나머지 20%는 유가 하락에 기인

○ 한편, 계량모형으로 예측한 2021년 글로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.9%로, 일부 신흥시장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를 단기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

-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~13년 중 누적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로 물가상승세가 비교적 급격할 것으로 전망

- 선진국과 절반 정도의 신흥시장국에서 물가상승률이 국가별 목표 수준 및 범위 내에서 유지되겠으나, 나머지 신흥시장국에서는 목표 범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

○ 현재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므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낮고 안정적인 수준(2% 내외)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

- 그러나, 일부 구조적 변화(잠재성장률 하락, 리쇼어링 증가, 인구증가 둔화 등)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동하여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물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

【분석방법론】 Factor Augmented VAR Model, Event Study

미시제도

⑤ "The Diffusion of Disruptive Technologies"

출처: *NBER Working Paper Series No. 28999*

저자: Nicholas Bloom(Standford大), Tarek Alexander Hassan, Aakash Kalyani(Boston大), Josh Lerner(Harvard Business School), Ahmed Tahoun(London Business School)

【핵심내용】

ㅇ 최근 혁신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, 방대한 미시 데이터*를 이용하여 혁신 기술이 기업 및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세부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됨

*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혁신의 동학(dynamics) 및 영향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, 측정 시 기술혁신 외 잡음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

ㅇ 본 연구는 미국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혁신 기술(disruptive technology)을 식별하고, 해당 기술이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- 1976~2016년 중 미국의 특허 인가 문서(patent awards file)와 기업들의 실적발표(earning call) 문서를 텍스트 분석하여 29개 혁신 기술을 식별

- 2007~20년 중 Burning Glass Technology社의 온라인 구인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혁신 기술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차원(숙련도, 지역 등)에서 분석

ㅇ 텍스트 분석* 결과, 2007년 이후 구인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혁신 기술은 '클라우드', '사회적 관계망', '스마트 기기' 및 '머신러닝' 순으로 나타남

* 텍스트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음
① 1976~2016년 중 300만개 이상의 특허문서에서 기술과 관련 핵심어(bigram)를 추출
② 이를 2002~19년 중 약 12,000개 기업의 실적발표 문서들과 매칭하여 305개 핵심어를 선별
③ 선별한 305개 핵심어를 위키디피아 등을 활용하여 29개 혁신 기술로 분류

ㅇ 혁신 기술은 초기에는 특정 지역 위주로 개발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일자리도 인근에 집중되었으나, 점차 구인 수요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

- 혁신 기술 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(40%), 워싱턴과 보스턴(21%) 등에서 등장했는데, 혁신 기술에 대한 구인수요의 지역별 집중도*는 해당 기술 등장 이후 10년간 약 22% 하락

* 특정(τ) 기술에 대한 노동수요의 연도별·지역별 비중을 도출한 후 해당 변수의 변동계수를 종속변수로, 기술 출현 이후 경과한 기간을 독립변수로 한 패널회귀모형을 추정

ㅇ 숙련도별 분석결과, 혁신 기술 등장 초기에는 구인 수요가 고숙련 근로자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고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하락

- 혁신 기술에 대한 구인수요 중 대졸 이상, 대학원 학력을 요구하는 비중이 각각 연간 1.7%, 1.8% 정도 하락

- 특히 혁신 기술에 대한 저숙련 근로자 수요는 고숙련 근로자에 비해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

ㅇ 본고는 미시 데이터를 통해 혁신 기술의 지역적 분포, 일자리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혁신 기술의 동학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

【분석방법론】 Textual Analysis, Panel Regression

⑥ "Skills, Degrees and Labor Market Inequality"

출처: *NBER Working Paper Series No. 28991*

저자: Peter Q. Blair(Harvard大), Papia Debroy(Opportunity at work社), Justin Heck(Michigan大)

【핵심내용】

ㅇ 본고는 대졸 근로자와 대졸 미만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 확대*가 고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고임금 직무(이하, 고난도·고임금 직무)로의 '이직 기회격차'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

* 미국의 경우 대졸 미만 근로자는 55세가 되어야 대졸 근로자 초임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, 근무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 속도도 대졸 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(1989년 대졸자 코호트 분석 결과)

ㅇ 기술-이동성 마찰 모형(skill mobility friction model)을 이용하여 2010~19년 중 미국 노동시장의 이직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, 희망 직무와의 기술수준 격차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해당 직무로의 이직 가능성이 낮아짐

- 기술수준 격차는 '근로자의 현재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*'과 '이직을 희망하는 고난도·고임금 직무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'과의 차이를 지칭

* O*NET데이터에서 제공하는 35개 직무 영역의 중요도(1~5단위)를 바탕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기술수준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보유한 기술수준의 대리변수(proxy)로 활용

- 근로자의 기술수준 격차가 1% 상승하면, 고난도·고임금 직무로의 이직률(flow rate)은 1.4%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

ㅇ 그러나 기술격차가 고난도·고임금 직무로의 이직을 제약하는 정도는 대졸 근로자가 대졸 미만 근로자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 간 이직 기회격차가 임금격차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

- 대졸 및 대졸 미만 근로자 간 ASMF(absolute skill mobility friction)의 차이*는 0.58%p로서, 기술수준 격차가 존재할 때 고난도·고임금 직무로의 이직 가능성은 대졸 근로자가 대졸미만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

* 근로자의 기술수준 격차 1% 상승시, 대졸 근로자와 대졸 미만 근로자의 고난도·고임금 직무로의 이직률 변동분 차이

- 이러한 결과는 대졸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 또는 직무교육(OJT)을 통해 기술격차를 보다 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고용주의 기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

- 한편 고졸 및 전문대졸 노동자 간 ASMF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, 고용주의 선호는 대졸 근로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임

ㅇ 본고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기존 이론과 달리 대졸 여부에 따른 이직기회의 차이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

【분석방법론】 Skill Mobility Friction Model

⑦ "Trade, Jobs, and Inequality"

출처: *IMF Working Paper 21/178*

저자: Kim Beaton, Valerie Cerra, Metodij Hadzi-Vaskov(IMF)

【핵심내용】

ㅇ 본고는 수입 경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

- 전 세계의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입 경쟁 충격을 식별하며, 130만개의 기업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, 임금, 매출, 순이익, 투자 등에 대한 충격 반응을 분석

ㅇ 분석 결과, 수입 증가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, 그 정도는 산업별 및 국가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남

- 수입 증가 시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하였으나, 고숙련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경쟁 심화로 혁신이 촉진되면서 고용이 오히려 증가

- 산업내 무역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고용 규모가 증가

- 국가별로는 신흥시장국 소재 기업의 고용이 악화된 반면 선진국 소재 기업은 증가

- 수입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생산성 노동자가 고생산성 노동자로 대체되면서 기업의 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

ㅇ 한편, 수입 경쟁은 기업의 매출, 이윤, 투자 등의 확대를 유발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도 존재

- 특히, 수출기업은 비수출기업에 비해 고용 증가율이 높았으며,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 증가 규모도 확대

ㅇ 수입 경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 및 정책 요인에 따라서도 상이한 것으로 분석

- 교육제도가 개선되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는 한편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고용이 증대됨

- 반면, 금융규제로 기업의 평균 임금이 하락하면서 수입 경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

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수입 경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혁신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이 교육 및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해야 함을 시사

【분석방법론】 IV Regression

⑧ "A Theory of Debt Accumulation and Deficit Cycles"

출처: *CEPR Discussion Paper DP16329*

저자: Antonio Mele(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)

【핵심내용】

ㅇ 본고는 유권자가 부여한 유인 부합 책무(incentive-compatible mandate) 하에서 기초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선호하는 정부가 직면하는 시점 간 상충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

- 기초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유권자의 즉각적인 효용 증가라는 단기 편익과 함께 디폴트 및 금융시장 접근 제한 가능성이라는 장기 비용을 유발하므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는 긴축재정을 실시하는 것이 최적임

ㅇ 이론모형 분석 결과, 기초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재정 임계치(fiscal tipping point)를 초과하면 정부가 흑자 기조로 전환하였다가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되면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과정이 장기간 반복

-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부채비율은 평균회귀 성향을 나타내며, 부채비율이 재정 임계치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디폴트 임계치(default boundary)를 초과하면 디폴트가 발생

- 기초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잔액 간에 관찰되는 양(+)의 상관관계는 긴축재정 이행 확률이 부채비율이 높은 시기에 상승한다는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

- 재정 임계치에서 디폴트 임계치까지의 거리(distance-to-default)가 10~20%에 불과한데, 이는 부채비율이 상당 수준 악화된 이후 정부가 뒤늦게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

- 스프레드*는 재정 임계치 부근에서 급등하며, 근시안적 정부정책, 디폴트 이후 자본시장 재진입 가능성, 거시경제 변동성 등에 따라 스프레드 수준이 결정됨

  * 디폴트 리스크 보상을 위해 정부가 투자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자본비용과 안전자산 금리의 차이

ㅇ 거시경제 변동성이 클수록 정부는 재정 임계치를 하향 조정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므로 변동성이 작은 국가일수록 부채비율을 방만하게 관리함에 따라 디폴트 확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변동성 역설이 발생

ㅇ 중앙은행 등으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은 위기 시에는 스프레드 축소에 기여하지만 정부가 재정긴축을 연기할 유인을 제공하므로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부채비율과 스프레드의 확대를 유발

ㅇ 본 연구는 디폴트 확률이 높은 신흥국의 경우 재정정책의 기준이 되는 재정 임계치 수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게 되면 부채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대외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

【분석방법론】 Model of Sovereign Debt

⑨ "Rally Around Which Flag?: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Rally Around the Flag Effects Using Focused Group Discussion with North Korean Defectors"

출처: *Development Studies Series DP20-01*

저자: 한바란, 이인복, Chrysostomos Tabakis(KDI 국제정책대학원)

【핵심내용】

○ 본고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한 원인을 결집효과(rally around the flag effect)의 관점에서 분석

- 2016~17년 중 고강도 유엔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이후 탈출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면접(focus group discussion)을 실시

○ 제재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재로 인해 경제적 고통이 늘어나고 대중이 제재 체제를 인지하며 대중이 당국에 제재가 해제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

-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제재로 인한 생필품 가격 상승, 사회주의 배급 중단, 세금부담 증가 등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며 특히 중간소득 계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

- 주민들은 제재의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였으나 당국의 정보 통제에도 불구하고 제재 시행국, 범위, 영향 등에 대해서는 중국 뉴스, 장마당에서의 입소문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

- 경제정책 실패, 외부로부터 정권에 대한 부정적 정보 유입,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시스템과 결부된 부정부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재 이후 제재 시행국보다 북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

○ 이처럼 제재에 따른 경제난, 제재에 대한 인지, 정권에 대한 신뢰성 하락이라는 조건은 충족되었으나 아래 요인으로 인해 핵무기 유지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중의 결집은 나타나지 않음

- 정권에 대한 반감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고통보다는 주로 만연한 부패 및 강압적 행정에서 비롯되어 제재 해제를 위해 핵 포기를 주장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음

- 북한 주민들은 제재의 원인이 핵 개발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서방국들의 압박에 있다고 인식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이 국가 주권 및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짐

기후변화

⑩ "The Poverty and Distributional Impacts of Carbon Pricing: Channels and Policy Implications"

출처: *IMF Working Paper No. 2021/172*

저자: Baoping Shang(IMF)

【핵심내용】

ㅇ 바람직한 탄소세 설계를 위해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(빈곤과 불평등)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

ㅇ 본고는 탄소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요 전달경로*별로 문헌들을 정리하고, 탄소세 설계 시 소득분배의 차원에서 고려할 요인들을 제시

* 대표적으로 ①소비경로(consumption channel), ②소득경로(income channel), ③보건경로(health channel), ④세수환원경로(revenue recycling channel)의 4가지로 구분

탄소세의 소득분배 효과: 주요 전달경로

소비경로	경제주체의 탄소 집약적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탄소세 부담 증가
소득경로	저탄소경제로 전환(친환경 일자리 증가, 신기술 수요 증대) ⇒ 요소소득별 부담 변화[1)]
보건경로	탄소 감축 ⇒ 공해(air pollution) 감소 ⇒ 개인의 건강 개선, 사망률 하락[2)]
세수환원경로	탄소세 세수를 공공투자(사회인프라, 교육 및 보건 등) 재원으로 사용[3)]

주: 1) Marin & Vona(2019), Goulder et al.(2019) 등
2) 저소득층일수록 공해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에 거주(Hsiang et al., 2019)
3) 공공투자의 수혜집단이 저소득층일 경우 불평등이 완화(Coady & Dizioli, 2018; Furceri & Li, 2017)

ㅇ 선행연구를 종합하면, 각 전달경로마다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는 시계(time horizon), 산업 및 지리적 여건, 효과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이

- 장기적으로는 탄소세 부담이 누진적(progressive)이더라도, 단기적으로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탄소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(소비경로)

- 또한 탄소집약적 산업은 지리적으로 집적되어 있어 동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동 및 고용기회가 제약될 가능성

ㅇ 따라서 탄소세의 평균적인 효과만을 분석할 경우 각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전달경로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

- **(경로의 복잡성)** 각국의 특성에 따라 주요하게 작동하는 전달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탄소세의 설계·개혁 방향을 설정

- **(시·공간적 이질성)** 탄소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지리적·동태적 영향을 감안하여 불평등 악화를 방지할 필요*

* 탄소세 부과 시 단기적으로 소비 및 소득경로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데, 이때 재분배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후생악화를 방지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

- **(경제주체의 이질성)** 소득수준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소득원천, 인종, 지역별로 탄소세 부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별적인 지원(targeted measures)을 병행할 필요

【분석방법론】 Literature Review